

도박이 된 배추농사 한숨만 쌓이는 농심

가격 널뛰기·밭 갈아엎기 매년 되풀이에도 당국은 수수방관

해남에서 1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정모(44)씨는 다음주에 배추밭을 갈아엎기로 했다. 어차피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를 수확한 뒤 차를 빌려 공판장으로 실어다 파는 것보다 산지에서 배추를 폐기 처분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3년을 주기로 하는 배추 '도박'에 나섰다. '대박'을 터트리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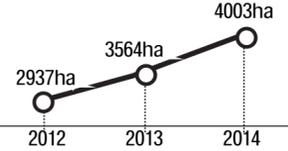
정씨가 올 가을 배추를 재배한 면적은 3만3057㎡. 밭 임대료와 인건비, 비료 등 3000만 원을 들여 배추를 길렀지만 정씨가 손에 쥐이는 돈은 고작 시장격리에 따른 보상금 180만 원과 일부를 내다 팔아 벌어들인 1000만 원 남짓으로 투자금도 회수 못하는 처지다.

농도(農道) 전남지역 내 배추농가들의 '배추밭 갈아엎기 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질 태세다. 매년 '배추밭 갈아엎기'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배추 재배 면적이 줄어들이는 커녕, 재배 농가는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수십년째 배추값 폭락 사태가 반복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는 '2~3년에 한번만 '대박'을 터트리면 된다'는 한탄주의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올 가을 배추 재배면적은 4003ha로 ▲2012년(2937ha) ▲2013년(3564ha)와 비교해 각각 36.3%, 12.3%씩 증가했다. 배추값 폭락 사태가 끊이지 않지만 농민들은 양파

전남 재배농가 되레 증가 '풍년의 역설' 시름 속 수급조절 정책 시늉만

■ 전남 가을 배추 재배 면적



■ 배추 포기당 가격 변화 추이



나 마늘 대신 배추에 사실상 '올인' 하고 있다. 전남도가 농민을 상대로 재배의향 조사를 한 결과, 마늘·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 8~10%씩 감소한 반면, 올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 12.3% 올랐다.

배추값 폭락 및 갈아엎기 사태가 잇따르는데도 배추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잘 걸리면 대박'이라는 투기 심

리가 한몫을 하고 있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2010년 3300원 ▲2011년 890원 ▲2012년 3381원 ▲2013년 1530원 ▲2014년 1091원으로 2~3년 주기로 크게 올랐다. 결국 '대박' 시기를 잘 맞춘다면, 본전을 뽑고도 남을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다, 배추 대신 심을 작물도 마땅치않고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남도가 매년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의향조사를 거쳐 작물별 적정 재배량을 권하고 있지만 농민들 '투기' 심리를 잠재울만한 수준은 못된다. 배추를 대체할 작물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인 '적정 재배량 권고'만으로는 농민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십년째 달라지지 않는 배추값 파동 사태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정책도 한몫을 했다.

지난 2011년 당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배추값 폭등 같은 농산물 가격 파동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에서 배추를 폐기하는 농민의 마음은 이해해 나 농촌 고령화로 농민들이 그간 재배해 왔던 작물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권고하는 재배를 갑자기 재배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농작물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온정 나누는 아이의 따뜻한 마음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광주 구세군교회의 자선냄비가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시중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잣대 엄해진 광주고법

도의원 동생 점유 원심 깨고 법정 구속 등 양형 기준 벗어난 1심 감경 경고 잇따라

광주 고등법원의 판단 잣대가 '준엄'해지고 있다. '정치바람'을 탄다는 선거법 재판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따르겠다는 의지가 법원 안팎에서 전해지고 있다. '슬람망이 판결', '법정형량과 따로 노는 판결' 등이 끊이지 않았던 예전의 '관대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당장, 판사자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작량(酌量·집착해서 헤아림) 감경(減輕)'이 반영, 대법원 양형(量刑)기준을 벗어났다면 '작량감경을 해서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도 잇따라 1심 재판부의 '온정주의적' 선고 경향에 대한 '주의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동생 전모(47)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2명 중 우모(43)씨에 대해 원심(벌금 200만 원)을 깨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씨의 원심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8월~3년 4개월)을 벗어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의 작량 감경을 반영한 '양형 기준 하한선' 아래 형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곳저곳에서 말이 나온다. 되도록이면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뿐 아니라,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도상해 등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례 및 약 4살짜리 아들과 함께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는 점 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5년~8년)의 하한선을 벗어난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절도·횡령) 등으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4년6월~9년 5월)보다 낮은 원심 형량(징역 3년 6월) 대신, 징역 5년

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 사례 중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징역 10월~2년 6월)을 벗어났지만 검찰이 항소(구형량 벌금 500만 원)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데 따라 원심을 유지한 것 외에는 양형기준 권고형을 벗어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고등법원 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은 향후 재판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으로, 온정주의적 선고 경향으로 제기됐던 '고무줄 판결'이라는 예전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능 만점자 확산 반대' 광고 소동...알고보니 노이즈 마케팅



○...수능 만점자 전국 확산 결사 반대! 시내버스 광고를 목격했다는 글이 SNS에 퍼지면서 격분(?)하는 수능생의 댓글이 수백건 달리는 등 한바탕 소동. ○...11일 페이스북 등 SNS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광주 시내버스에 '대치동 고등학생·학부모 연합'이 수능(수학·영어) 만점자 전국 확산을 반대한다고 낸 광고를

목격했다는 인증샷이 잇따른 것. ○...이 광고는 사실 교육업체에서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수단으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낸 버스 광고로 밝혀졌는데, 광고업체 담당자는 "광고는 한 달간 광주지역 시내버스 50대에 매주 다른 주제와 문구로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지검의 골육

세월호 관련 해경 기소 관할 위반 판결 수개월 수사 기록 인천지검에 넘겨줄 판

법원 판결을 놓고 검찰이 '위법·부당성'을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구남업체 언딘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 광주지검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다.

광주지검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판대비계 나오경감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의 관할 위반 주장과 관련, "이 사건은 광주지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표준은 '범죄지(결과 발생지 포함), 피고인의 주소·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현재지인데, 어느 것 하나 광주지검과는 무관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범죄지는 인천 또는 전남 진도,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로,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 지원도 광주지검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검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진도는 광주지검 해남지원 관할 지역으로 광주지검 본원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지검은 수개월간 수사 기록을 인천지검에 넘겨 기소를 다시 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골육'을 맞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재판도 당연히 인천지검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즉각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 명백하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

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등을 조목조목 근거로 제시하며 재판부 판단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광주지검에서 지인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법 본원 관할구역이 지원 관할 구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부 판결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불복,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의 재판 이송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인천지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피고인과 관련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광주지검에 관할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약회사 자금관리를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림유) • 시공사 | 건해중(건설)주 • 신약사 | 아시아신약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약사 | 아시아신약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